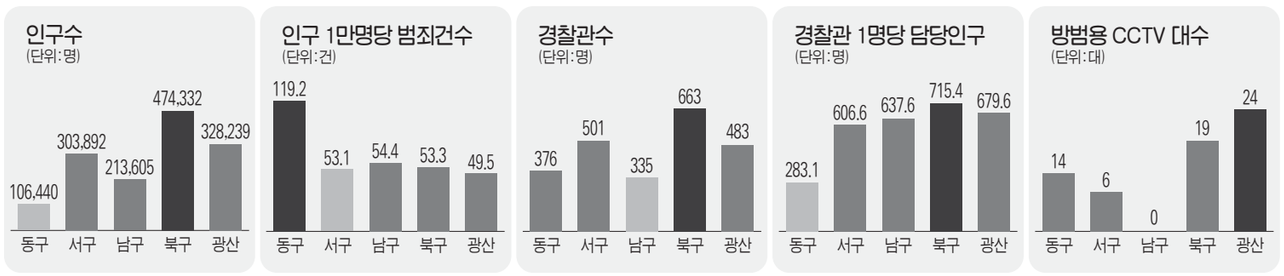

광주 자치구별 범죄 통계 분석해보니…

동구 범죄 발생비율 가장 높다

1만명 당 119건…동〉남〉북〉서〉광산구 순

인력 재배치·CCTV 등 치안시설 보강 절실

광주 구도심인 동구의 인구 1만명당 범죄발생빈도가 타 자치구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치안 상태가 가장 불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안면적이 넓은 광산구와 북구, 서구 등은 오히려 범죄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 북구는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아 인력보강이 시급했으며, 5개 자치구 모두 CC(폐쇄회로)-TV 등 치안시설 보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광주일보가 광주지방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5대 범죄(강도·절도·살인·폭력·강간)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1만명당 범죄건수는 119.2건에 달했다.

이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범죄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남구(54.4건) ▲북구(53.3건) ▲서구(53.1건) ▲광산구(49.5건) 등의 2.2~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동구의 범죄빈도가 높은 것은 충장로와 금남로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몰리는 데다 범행 은폐와 도주에 용이한 주변 환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옛 전남도청 이전 등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빈 상가나 주택 등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방범이 허술한 주택 또는 원룸 등이 밀집한 것도 범죄가 빈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동구는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주민 수가 283.1명으로, 광주 평균(584.5명)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치안 환경으로 인해 올 들어 광주 전체 범죄의 15.5%(1천269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 인구가 광주 인구의 7.4%(10만6천440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은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반면 광산구는 치안면적이 광주 전체의 44.5%(222.9㎢)에 이르지만, 1만명당 범죄건수는 50건을 밑돌았다. 또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679.6명으로, 평균(584.5명)보다 담당 인구 수가 많았지만 치안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같은 상황은 북구도 비슷하다. 북구는 면적이 광주 전체의 24.3%(121.8㎢)로,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넓지만 1만명당 범죄는 53건 수준이었다. 다만 북구는 경찰 1인당 주민 수가 715.4명으로, 평균(584.5명)보다 22.4%를 초과해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높았다.

서구의 경우 올해 범죄 검거율이 단연 높았다. 서구의 상반기 검거율은 99.3%로, ▲광산구(87.8%) ▲북구(71.3%) ▲동구(68.2%) 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구는 상반기 검거율이 67.5%에 그쳤다.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병준 교수는 "경찰의 인력 배치는 해당 지역 인구 수와 강력범죄 발생 건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동구 등 유동 인구가 많아 범죄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경찰력의 효율적인 배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는 ▲광산구(24대) ▲북구(19대) ▲동구(14대) ▲서구(6대) ▲남구(0대) 등으로 날로 폭증하는 범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검거율 높아졌지만 강력범죄 대응 여전히 취약

광주지역 5대 강력범죄 범인검거율은 지난해 62%에서 올들어 79%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올 들어 발생한 살인과 떼강도 등 굵직굵직한 강력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8천206건이다. 검거건수는 6천489건(검거율 79%)로, 치안 상태가 상대적으로 호전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주의 검거율 개선은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간 실시된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광주 경찰은 이 기간 강·절도범 621명을 검거한 것을 비롯, ▲조직폭력 26명 ▲불법 사금융 162명 ▲전화금융사기 84명 ▲인터넷 도박 318명 ▲마약류 사범 102명 ▲성매매 사범 319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경찰이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동안 광주지역 곳곳에선 강력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전반적인 검거율은 높아졌지만 강력 사건 등에 대한 대응력은 여전히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단속 전후 발생한 강력사건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4월 2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S교회 인근 앞길에서 발생한 여의사 피살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앞서 지난 4월 15일 오후 7시50분께 남구 구동 김모(39) 형제가 하는 보석공방에 복면을 쓴 3인조 강도가 침입, 흉기로 위협한 뒤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또 같은 달 8일부터 27일까지 북구와 동구 6곳의 동(洞) 주민센터가 잇따라 털렸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구청 고위 간부가 비데·정수기 강권

광주 동구 실·과·주민센터·상가 등에 설치

광주지역 일선 구청의 한 고위간부가 지인이 운영 중인 특정업체의 정수기 등을 각 실·과와 동(洞) 주민센터에 임대 설치토록 권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동장은 비데를 일부 부하직원과 주민들에게 임대 설치토록 강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 동구와 관내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W업체의 정수기 29대와 공기청정기 10대, 비데 5대를 각 실·과와 동 주민센터에 임대 설치했다. W업체는 동구청 고위간부인 A씨의 지인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는 매월 적게는 1만1천 원, 많게는 4만6천500원이다. 2007년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가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대량 임대 사용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몰아주기 의혹을 샀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동장이 W업체의 비데 20여 대를 부하직원·주민·상가 주인·통장에게 강제적으로 떠맡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청 직원과 주민들은 "동장이 '비데를 팔아 달라'며 부탁했는데, 한두 번은 응했지만 수차례 강권해 거절했다"며 "이는 강매나 다름없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누가 감히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위간부 A씨는 "지인이 운영 중인 업체의 정수기 등을 각 실과 등에 설치토록 권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B동장은 "자율에 맡겼을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찰, 정광학원 채용비리 수사

광주광산경찰은 최근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가 드러나 물의를 빚은 사학법인 정광학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정광학원 산하 중·고교 책임자들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불교 관련 단체의 고발이 지난달 검찰에 접수됨에 따라 검찰 지휘 아래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정광학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채용과정에서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 학교·문화회관 운영 수영장

9곳 중 6곳 안전요원 없다

전남지역 일선 학교와 문화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9곳 중 6곳에는 안전요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남도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선 학교와 문화회관 등에 설치된 수영장 10곳(실내 9곳, 실외 1곳)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전남체고 등 3곳뿐이다.

또 배치된 안전요원도 전남체고 1명, 곡성교육회관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각 2명 등 5명에 불과하고, 이들 안전요원도 자격증을 가진 수영코치가 겸하고 있어 사실상 전담요원은 없는 실정이다.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도 적게는 1천만원(강진 도암초, 전남학생회관)에서 많게는 2억원(옥과초, 곡성교육회관)까지로 돼 있어 20배나 차이가 났다.

도암초교 수영장은 사고당 보상한도가 1천만원밖에 안돼 곡성문화회관 10억원에 비해 100분1 수준이다. 특히 전남학생회관은 1인당 한도액 1천만원에 사고당 보상액수도 1억원에 불과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전 구의원 범행 자백

광주 40대 여성 살인사건〈본보 19일자 6면〉을 수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은 22일 범행을 강력 부인하던 피의자 강모(52)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전 광주 모 자치구 구의원인 강씨는 경찰에서 "동거녀 이모(45)씨가 범행 당일 전 남편의 모친상 조문을 다녀온 것에 화가 나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체불명 백색가루 한바탕 소동

쌍나팔

○…'정체불명의 백색가루가 발견됐다'는 신고에 경찰서 보안계 직원을 비롯한 5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2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주택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백색가루가 든 봉지를 발견한 주민 김모(53)씨가 신고를 해왔다는 것.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봉지 4개에 나뉘어 담긴 백색가루(500g) 주변에서 김모(여·48)씨의 이름이 적힌 건강보험 카드를 발견하고 김씨를 조사.

○…김씨는 경찰에서 "15년 전 딸만 잇따라 낳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일념에 '소다를 몸에 바르면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용하다 남은 가루를 내다버렸다"고 해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